

3》 외대 학생들, 총장 모의투표 진행



6》 그린캠퍼스 가까워졌으나 의식 제고 필요해



8》 회기동, 동대문구 위반건축물 수 '1위'



양 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서울캠퍼스 'KHUtopia'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 국제캠퍼스 '열림'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 '동행' 배득현(산업경영공학 2010) 정후보이다. <관련기사 4면>

## 입학금 감축,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현 정부 100대 공약의 일환인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교육부, 대학, 학생 간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제자리를 걷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 연합(사총협)의 협상에 이어 지난 9일 열린 교육부·사립대·학생대표 간 2차 회의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사총협과의 협상에서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향이 있는 대학에 대해 ‘학교별 입학금 감축 계획안’을 받겠다고 고지했다. 우리학교는 내년 입학생에 대한 입학금 감축 계획이 없으며, 계획안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예산처 이승민 계장은 “입학금 감축이 현재 우리학교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학교는 입학금에 대해 “고등 교육법 제11조 1항(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

금을 받을 수 있다)에 근거해 납부되고 있다”며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 등록금이기에 입학경비로만 쓰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입학금만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장을 고수해왔다.(불붙은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요구…오는 12일에는 소송 청구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입학금 감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입학금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 대학 측의 주된 입장이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사립대학에 공적기능은 요구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교육부는 사총협과의 협상에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대학에 국고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대학은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권 미래정책원장은 “인센티브는 불명확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입학금에 대해 “고등 교육법 제11조 1항(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

금을 받을 수 있다)에 근거해 납부되고 있다”며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 등록금이기에 입학경비로만 쓰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입학금만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장을 고수해왔다.(불붙은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요구…오는 12일에는 소송 청구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입학금 감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입학금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 대학 측의 주된 입장이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사립대학에 공적기능은 요구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교육부는 사총협과의 협상에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대학에 국고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대학은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권 미래정책원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입학금을 감축한 국립대학에 주는 지원금 같은 확실한 약속을 원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총협이 협상에서 ‘입학금을 감축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으나 권 미래정책원장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아니면 도다’라는 식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교육부가 분석·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출 OECD 평균은 70%인 반면 우리나라 34%에 불과했다. 권 미래정책원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 인정 대학도 조교도 ‘발만 동동’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고용노동부가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동국대 한태식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전임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동국대 임봉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대학원생 조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학생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실질적 사용자인 한 총장은 이를 목과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자 동국대는 공식 입장장을 내고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동국대 총학생회 고발로 노동부,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해

이번 고발은 노동부가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 성격을 사실상 인정한 첫 사례로 풀이된다. 우리학교도 동국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조교에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동국대 사례는 우리학교에서도 언제든 비슷한 취지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선례가 된 셈이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은 “만약 대학원생이 본인의 정체성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큰 추세라면, 대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순수하게 강의만 듣고, 연구를 하는 학생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우리학교에서 열린 대학원인권토론회에서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 서정호 회장의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행동하기 전에 구성원과 꼭 이야기 하라”는 발언이 재조명된다. 고발로 인해 오히려 현재 대학원생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당시 서 회장은 ‘대학원생은 근로자인가 학생인가’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고발로 인해 조교 인원이 감축됐고,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도 있고 조교 장학이 축소되는 등, 예상치 않은 부작용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조교장학금 상한선은 500만 원이다. 근무 중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9,765원인 셈이다. 실제로 500만 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들이 적지 않다. 대학원생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이 시급 9,765원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이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윤단비(무용학) 회장은 “교수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하고, 공부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며 “500만 원이라도 받으면서 조교 업무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대로 “받는 돈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의견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원생 조교들 간에도 근로자 인정에 대해 상반된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국대에서 졸발된 대학원생 근로자 인정 앞에 대학원생 조교도, 대학도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로 얼어있는 모양새다. 대학의 선진노동문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지점임이 분명하다.

## 교수의회 “공개답변 하라”, 책임부총장제 재질의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교수의회는 한글대 대외협력부 총장을 특정해 책임부총장제에 대해 재질의였다. 지난 6일 우리신문을 통해 한글대 부총장은 교수의회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재질의는 한글대 부총장이 우리신문을 통해 한 답변에 대한 것이다. 교수의회는 “본부의 인식에 깊은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어떠한 진정성과 고뇌와 설득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글대 부총장에게 직접 재질의를 했다. 교수의회는 10월 11일 책임부총

장제도 신설에 관한 문건이 공개되고 난 후 ▲책임부총장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책임부총장으로 내정된 한글대 대외협력부총장의 자질이 충분치 않으며 ▲책임부총장의 직무가 총장의 책무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정책원과 한글대 부총장은 ▲책임부총장의 지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의 지위와 같으며 ▲교수들에게 연구를 권하는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며 ▲대외협력부총장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지 총장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교수의회는 지난 9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글대 부총장에 게 세 가지 재질의를 던졌다. 이번 재질의는 이전 첫 번째 질의서와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질의 대상을 ‘한글대 대외협력부총장’으로 특정한 것이 이번 재질의에서 눈에 띠는 점이다. 교수의회는 ▲

교수의회 보직자 평가에서 최하점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설명하라, ▲책임부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교수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교수의회는 16일까지 공식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엘로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전문가 칼럼

교수·조교 상호존중 필요한 때  
김중백(사회학 교수) 교수 > 7면

